
복원력

Ⅰ. 금융기관	67
Ⅱ. 대외지급능력	78
Ⅲ. 금융시장인프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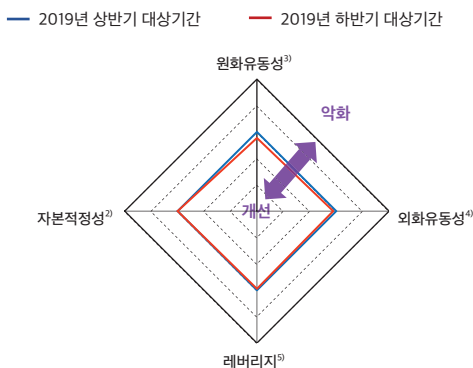
I. 금융기관

1. 은행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급격한 자금순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일반은행은 안정적인 수준의 복원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성 저하,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증대 등에 대비하여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그림 I-1).

그림 I-1. 일반은행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주: 1) 2018년 4/4분기~2019년 1/4분기 대비 2019년 2/4~3/4분기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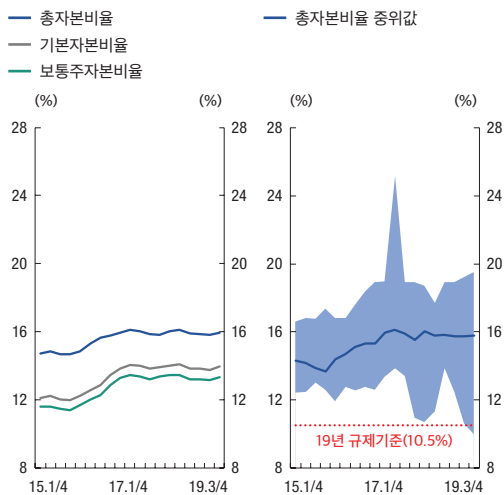
-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4) 외화 LCR
- 5) 레버리지비율

자료: 한국은행

손실흡수능력 양호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총자본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15.96%로 전년동기(16.12%)보다 0.16%포인트 하락하였다. 일반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32%로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19년 규제기준(10.5%, D-SIB¹⁾ 11.5%, 인터넷전문은행²⁾ 8.0%)을 상회하였다(그림 I-2).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¹⁾²⁾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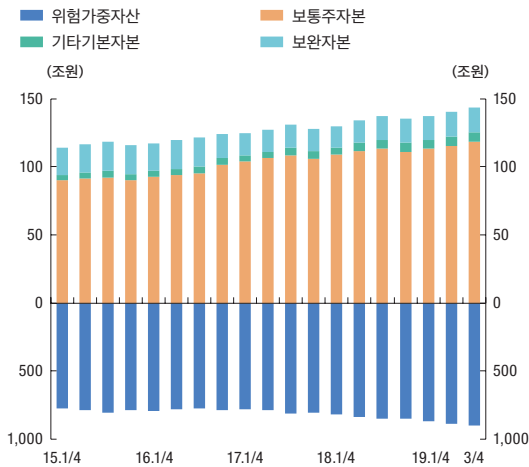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 3) 2019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자산이 늘어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한데다 수익성 저하에 따라 이익잉여금 증가폭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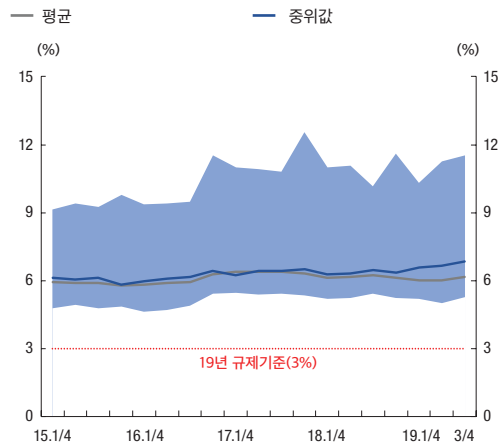
- 1)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가 추가될 예정이다.
- 2)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까지 바젤Ⅰ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2020년 1월부터는 유예되어 왔던 바젤Ⅲ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의 합) 적립은 3개년(20~22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¹⁾²⁾

주: 1) 기말 기준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1-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³⁾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명목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³⁾은 2019년 3/4분기 말 6.15%로 전년동기(6.22%) 대비 0.07%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총자산 증가에 따른 명목 총익스포저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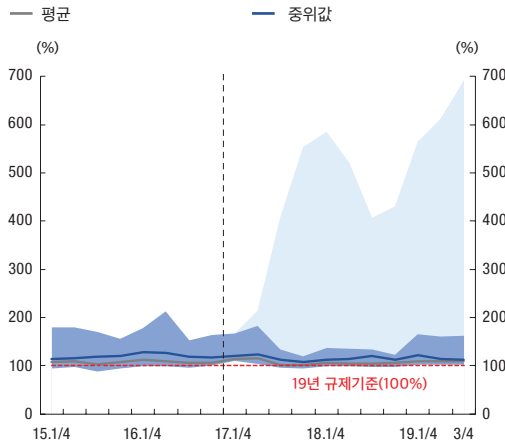
유동성 상황 개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19년 3/4분기말(최종월 평잔 기준) 109.1%로 전년동기(104.7%) 대비 4.4%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국공채를 중심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확대⁴⁾한 가운데 개인 예수금 등 이탈률이 낮은 부채⁵⁾ 위주로 자금조달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9년 10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5).

3)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명목총익스포저(내내+난외항목).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명목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레버리지비율은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식되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2020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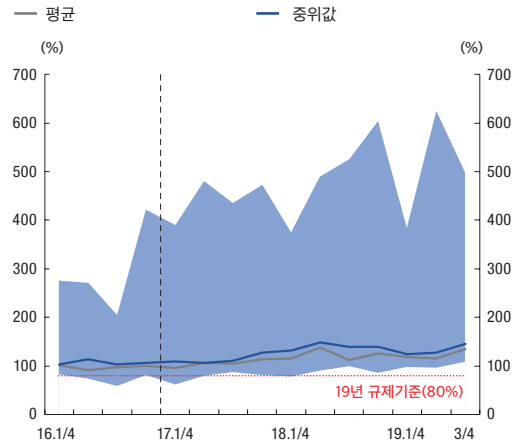
4) 2020년부터 신 예대를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자산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신 예대출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 자금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7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5) 2017년 7월부터 영입적 예금의 분류요건이 강화되어 순현금유출액의 산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LCR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개인 예수금 등 낮은 이탈률(5% 이하의 저이탈률)이 적용되는 부채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순현금유출액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³⁾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2016년까지는 기말 기준, 2017년 이후에는 분기 최종월 평잔 기준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⁶⁾은 2019년 3/4분기말(최종월 평잔 기준) 134.5%로 전년동기(112.6%) 대비 21.9% 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9년 8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¹⁾²⁾³⁾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2016년까지는 기말 기준, 2017년 이후에는 분기 최종월 평잔 기준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⁷⁾(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19년 3/4분기말 111.2%이며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표 I-1. 일반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¹⁾²⁾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4.1	112.2	112.0	113.0	112.1	111.2	111.2
중위값	111.2	111.3	110.5	110.5	111.2	110.3	108.3
최저	108.5	106.6	106.2	106.2	106.8	105.3	103.2
최고	124.6	123.5	124.1	124.1	131.5	132.7	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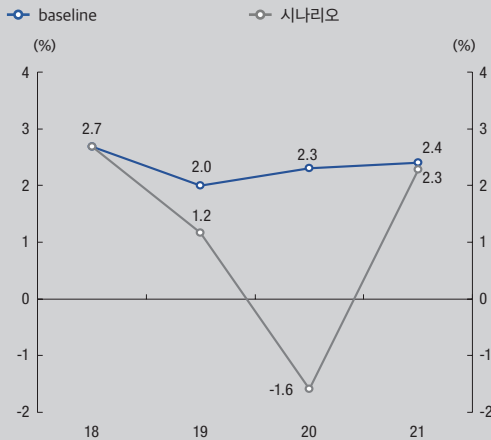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2) 기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6)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비율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되어 2019년 최종 규제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7)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치로, 글로벌 금융위기(09년) 당시 성장률(0.7%)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가와 환율은 그동안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변동성⁴⁾을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가는 위기 이전 고점 대비 38.5% 하락, 환율은 33.0%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19년 2/4분기 말이며 시나리오 충격이 2021년 2/4분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실물 충격 시나리오¹⁾



주: 1) 연간 국내 GDP 성장률 가정
자료: 한국은행 추정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대상

상기 시나리오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1차 손실과 전염손실을 추정하여 업권별 자본비율을 산출하였다. 금융기관의 1차 손실은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변수 관련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손익, 거시·금융 충격에 따른 업권별 고유손익⁵⁾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전염손실은 특정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의 신용손실과 부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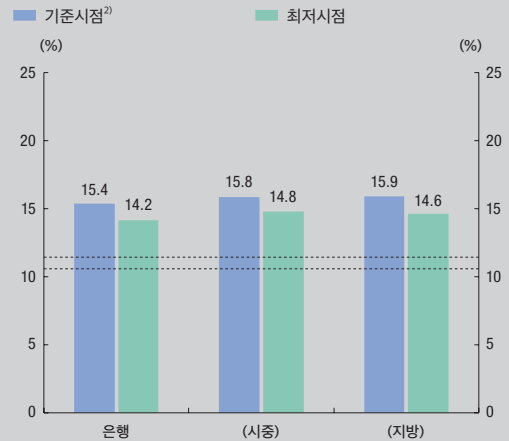
원 자산 급매에 따른 자산처분손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테스트 대상은 은행 17개, 보험회사 53개, 증권회사 44개, 상호금융조합(이하 '상호금융') 5개, 저축은행 79개,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8개 등 6개 금융업권의 206개 금융기관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업권의 자본비율이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다소 낮아지겠지만,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은행 자본적정성¹⁾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 1) 규제기준은 10.5%(D-SIB 11.5%)
2) 기준시점은 2019년 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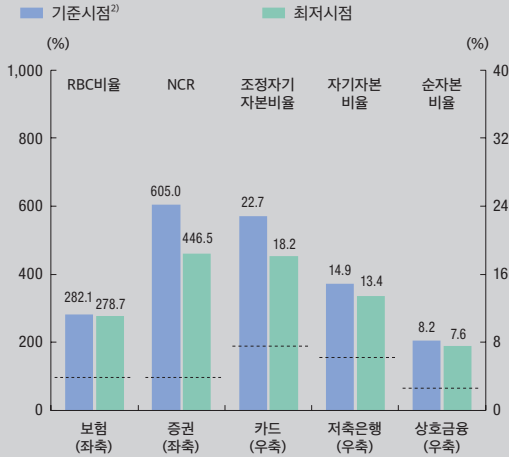
다른 업권을 살펴보면, 증권회사의 경우 자본비율이 2019년 2/4분기 605.0%에서 테스트 기간 중 최저 446.5%로(-158.5포인트) 여타 업권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주가하락에 따른 시장손실

4)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 대비 주가는 36.8% 하락, 환율은 39.2% 상승하였다.

5) 업권별 특성에 따라 이자이익(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보험료손익(보험회사), 수수료손익(증권회사 및 카드회사) 등을 나타낸다.

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음으로 카드회사(-4.5%포인트), 저축은행(-1.5%포인트) 등의 순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였다.

비은행 자본적정성¹⁾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 1) 규제기준은 보험 100%, 증권 100%, 카드 8%,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상호금융 2~5%
2) 기준시점은 2019년 6월말

요인분해 결과¹⁾

업권	기준 시점	총비용 변동	요인					기타	총격후
			신용 손실	시장 손익 ²⁾	고유 손익 ³⁾	전염 손실	기타		
은행	15.4	-1.2	-0.4	-0.1	-0.2	-0.1	-0.4	14.2	
(시중)	15.8	-1.0	-0.2	0.1	-0.2	-0.4	-0.3	14.8	
(지방)	15.9	-1.3	-0.6	0.1	-0.3	-0.2	-0.3	14.6	
상호금융	8.2	-0.6	-0.4	0.0	-0.1	-0.0	-0.1	7.6	
저축은행	14.9	-1.5	-1.8	-0.0	0.0	-0.0	0.3	13.4	
카드	22.7	-4.5	-1.3	-0.9	-2.7	-0.0	0.4	18.2	
보험	282.1	-3.4	-4.3	-9.8	-9.6	-0.2	20.5	278.7	
증권	605.0	-158.5	-17.4	-82.8	-32.6	-2.2	-23.6	446.5	

주: 1) 굵게 표시한 수치는 자본비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2) 시장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포함
3) 고유손익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카드·증권은 수수료손익, 보험은 보험손익을 의미

6)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 보유 자산에 대해서만 시가평가하였다. 향후 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22년 예정)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가 적용될 것이다. 보유 부채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가 적용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비율 하락 폭은 동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하락요인을 부문별로 보면, 은행,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은 대출 부도율 상승에 의한 신용손실 증가(각각 -0.4%포인트, -0.4%포인트, -1.8%포인트)에 주로 기인하였다. 보험회사(-9.6%포인트) 및 카드회사(-2.7%포인트)는 각각 보험손익 및 수수료손익 감소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였다.⁶⁾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증권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충격 후에도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전염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대외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 금융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대내외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부실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7.

신 예대출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¹⁾ 자금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감독당국은 2018년 1월 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자금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대출 산정방식 개선안(이하 '신 예대출 규제')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 예대출 규제 개요

신 예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원화대출금 산정 시 가계대출은 15%를 가산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은 15%를 차감한다.

원화예대출 산정방식 변경 내용

	(%)
변경 전	$\frac{\text{원화대출금}^{1)}}{\text{원화예수금}^{2)}} \times 100 \leq 100$
변경 후	$\frac{(\text{가계대출}^{3)} \times 1.15) + (\text{기업대출}^{4)} \times 0.85) + \text{기타대출}^{5)}}{\text{원화예수금}^{2)}} \times 100 \leq 100$

주: 1) 온렌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농림축산 및 수산정책자금대출 제외

2)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및 시장성 CD 포함(각각 원화예수금의 1% 이내)

3) 새희망홀씨대출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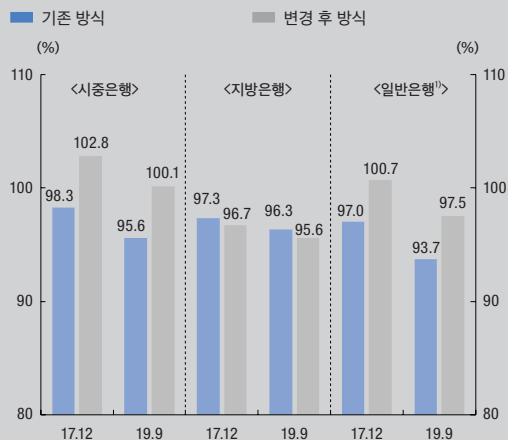
4) 개인사업자대출 및 온렌딩대출 제외

5) 개인사업자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예대출 규제 변경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7년 12월중 일반은행의 예대출은 97.0%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100% 이하)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100.7%로 높아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 비중(54.4%)이 높았던 시중은행의 예대출이 4.5%포인트 상승하여 규제비율을 상회한 반면, 지방은행(35.3%)은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일반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 변화를 통해 예대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일반은행의 예대출은 2019년 9월 93.7%로 하락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한 예대출도 97.5%로 규제기준 아래로 하락하였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³⁾

예대출 규제 변경에 따른 영향



주: 1) 예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시중, 지방 및 농협은행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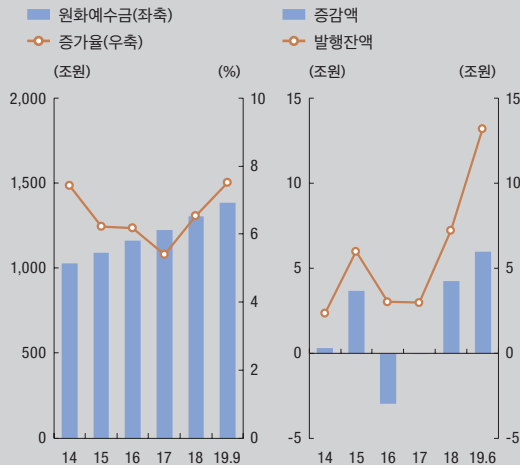
- 1) 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기업대출을 시작할 경우 신 예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2) 기업대출이 부동산산업대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은 가중치 조정에서 제외하였다. 예대출 산정방식 개편을 처음 발표(18년 1월)하였을 때에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 하향 조정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감독규정 개편안(18년 7월)에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개편안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3) 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13개) 가운데 10개 은행이 가중치 조정 시 예대출이 상승하였으며, 이 중 신 예대출이 100%를 상회하는 은행은 2017년 12월 총 6개에서 2019년 9월 총 3개로 감소하였다.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면 신 예대출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일반은행의 자금 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신 예대율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일반은행은 수신 측면에서는 원화예수금(신 예대율의 분모 항목)을 확대하고 여신 측면에서는 총대출금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먼저 일반은행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을 확대함으로써 신 예대율 하락을 도모하였다.⁴⁾ 원화예수금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7년 5.4%에서 2018년 6.5%, 2019년 9월 7.5%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8년 7월부터는 시장성 CD가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금으로 인정되면서, 기존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축소하던 CD 발행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큰 폭의 예수금 조달이 필요했던 일부 은행은 2019년 1~9월중 총 4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⁵⁾

원화예수금 규모 및 증가율 CD¹⁾ 발행잔액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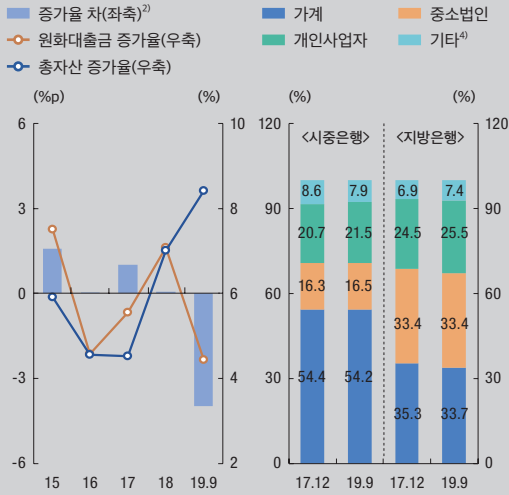
주: 1) 시장성 CD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 측면에서는 일부 은행의 경우 총대출금 증가속도를 조절하였다. 이는 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2017년 12월에는 원화대출금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1.0%포인트 상회하였으나, 2019년 9월말에는 총자산 증가율을 4.0%포인트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019년 9월중 일반은행의 예수금 조달규모(159.3조원)가 대출 증가액(121.6조원)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일반은행은 이를 주로 유가증권에 운용하였다. 유가증권 비중은 2017년말 14.8%에서 2019년 9월 15.9%로 상승하였다.

한편 예대율 규제 변경은 가계대출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 예대율 산정방식 적용 시 예대율이 상승하여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시중은행의 경우 2019년 9월말 기준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54.2%)이 2017년 12월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대출 비중(16.5%)은 0.2%포인트 상승하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정폭은 크지 않으나 가계대출의 수익률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높은 점⁶⁾, 국내 경기 둔화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점⁷⁾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비중(33.7%)이 1.6%포인트 하락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대출(38.6%)과 개인사업자대출(25.5%)이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하였다.⁸⁾

4) 2017년 7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강화(저이탈률 부채인 영업적 예금의 인정요건 강화)도 은행들의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노력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원화 커버드본드는 2014년 12월부터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금에 포함되었으나, 일반은행이 예대율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그동안 발행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신 예대율규제 적용을 앞두고 2019년 6월 국민은행이 5천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일반은행 최초로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었다.

원화대출금 증가율¹⁾차주별 대출 비중³⁾

주: 1) 시중은행 기준, 전년동기대비
 2) 원화대출금 증가율 - 총자산 증가율
 3) 원화대출금 대비
 4) 대기업, 공공 및 기타자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금융당국의 신 예대율 규제안 발표 이후 일반은행은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의 자금조달·운용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신 예대율 규제를 준수·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일반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은행의 자금운용이 실물경제상황, 자본적정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보다 총대출금을 축소할 경우 금융중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자금조달 구조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은행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위주로 자금유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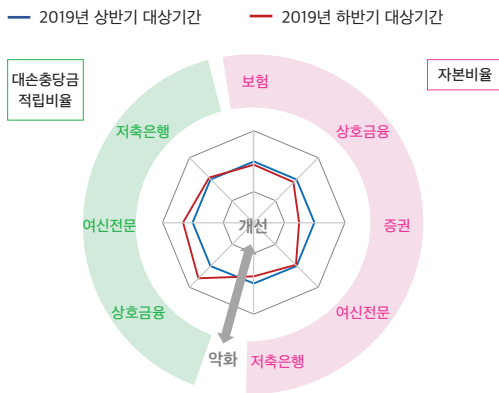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예대율 규제가 글로벌 금융규제와 상충 내지 중복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젤Ⅲ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나 두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⁹⁾ 또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도입¹⁰⁾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중복 적용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 1) 원화 가계대출금과 원화채권 이자수익률의 차이는 2017년말 1.22%포인트에서 2019년 9월말 1.46%포인트로 확대되었으나, 동기간중 시중은행의 유가증권이 23.1%(47.0조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금은 11.4%(53.8조원) 증가에 그쳤다.
- 2)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대상) 결과 국내은행은 2018년~19년 3분기중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가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예대율 규제 등의 정책이 가계대출의 팽창을 억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많이 하락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경기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원화대출금 대비)은 2017년 12월 26.6%에서 2019년 9월 24.3%로 하락하였다.
- 4) NSFR(가용안정자금/필요안정자금)은 장기간(1년 이상) 필요한 자금을 위해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존단기 1년 이상 시장성 수신(CD, 은행채 등)도 가용안정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자금조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 예수금에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
- 5) 현재 일반은행에는 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 3월말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시행 중이다.
- 6)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에 불과하며 감독당국도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 비은행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다.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는 순자본비율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각 업권별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은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다(그림 I-7).

그림 I-7.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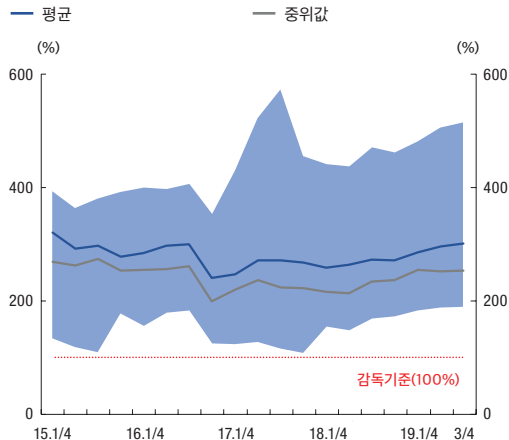
주: 1) 2019년 1/4분기말 대비 2019년 3/4분기말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복원력 대체로 양호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⁸⁾(RBC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300.8%⁹⁾로 시장금리 하락에 의한 채권

평가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272.1%)에 비해 28.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음영은 업체별 RBC비율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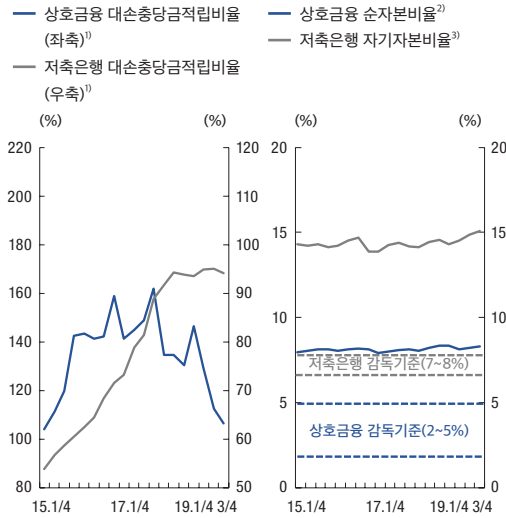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8.3%로 전년동기(8.4%)와 비슷하였으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130.6%) 대비 24.2%포인트 하락한 106.4%를 기록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15.1%로 전년동기(14.5%)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94.1%로 전년동기(93.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9).

8)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모인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9) 2019년 3/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60.0%로 전년동기대비 17.2%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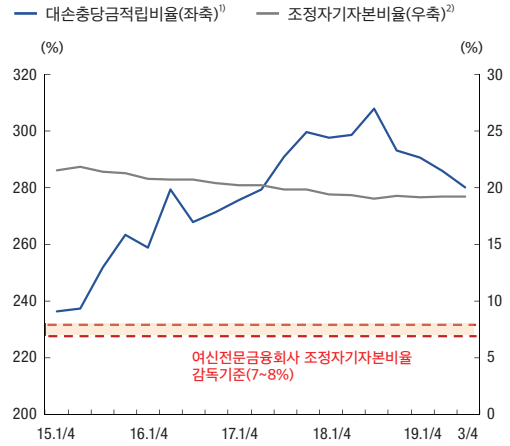
그림 I -9.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2)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3)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19.2%로 전년동기(1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감독기준(7~8%)을 상회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280.0%로 전년동기(307.8%) 대비 27.8%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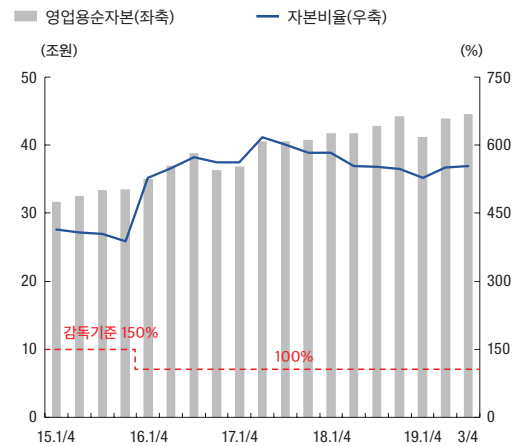
그림 I -10.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553.7%로 전년동기(55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 -11).

그림 I -11.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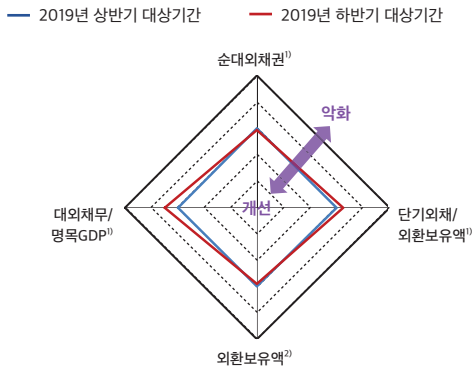


주: 1) 2015년 이전: 영업용순자본비율, 감독기준 150%
 2016년 이후: 순자본비율, 감독기준 100%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외환보유액은 2019년 11월말 4,075억달러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33.2%로 예년 평균(12~18년중 33.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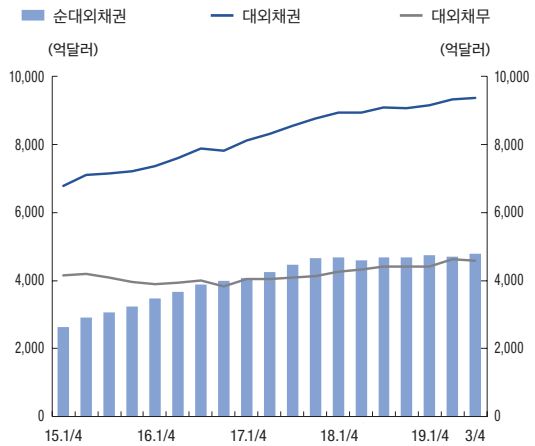


주: 1) 2019년 1/4분기말 대비 2019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9년 5월말 대비 2019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증가세 지속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19년 3/4분기말 4,79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120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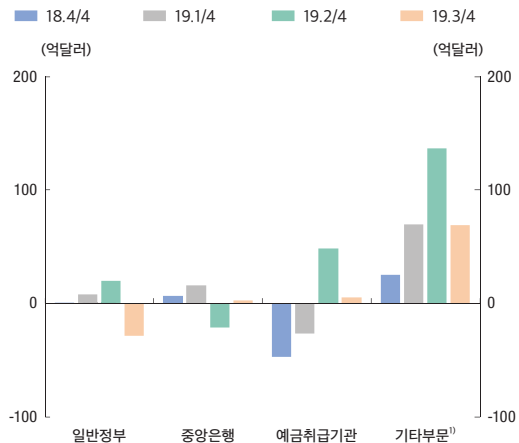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19년 3/4분기말 9,38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285억달러) 증가하였다.

금년 3/4분기중 대외채권 변동(+48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가 29억달러 감소한 반면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관이 각각 2억달러, 6억달러, 기타부문이 기관투자자의 해외 채권투자 등으로 69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3).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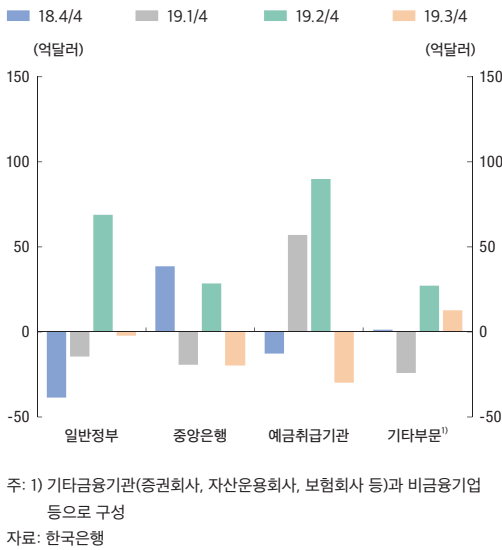


주: 1) 기타금융기관(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19년 3/4분기말 4,58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165억달러)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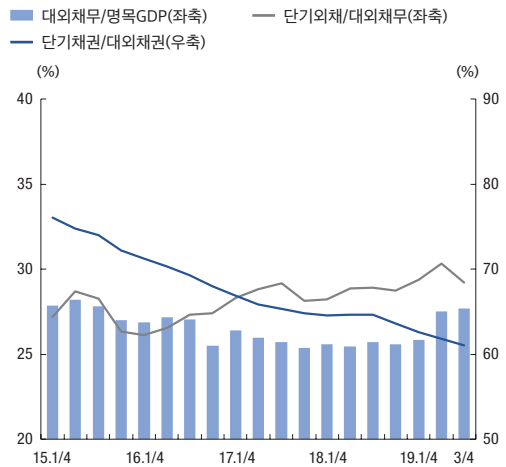
금년 3/4분기중 대외채무 변동(-39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2억달러, 20억달러, 예금취급기관은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차입 상황 등으로 30억달러 감소한 반면 기타부문은 해외증권발행 등으로 13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19년 3/4분기말 27.7%로 전년동기(25.7%)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29.2%로 전년동기(28.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대외채권 대비 단기채권 비중은 61.1%로 하락세를 이어갔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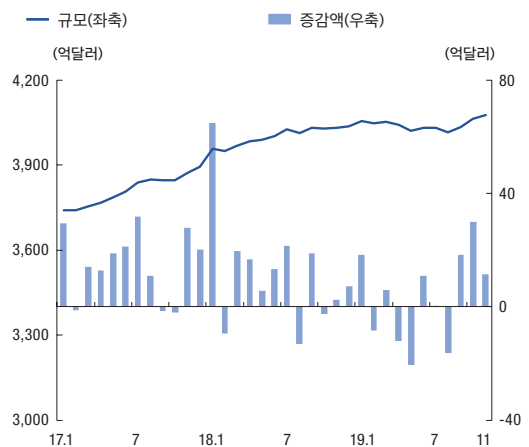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

2019년 11월말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38억 달러 증가한 4,075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미달러화 강세로 유로화·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꾸준히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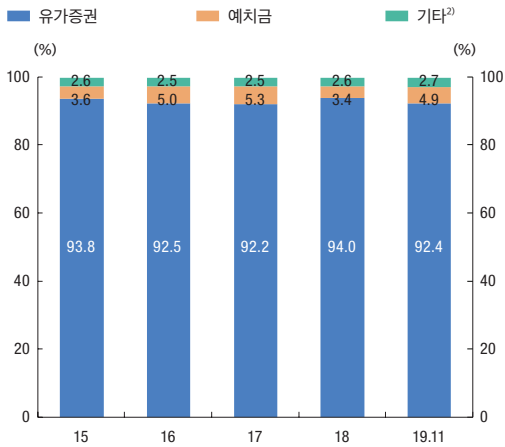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19년 11월말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2.4%) 및 예치금(4.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7).

그림 II-7. 외환보유액 구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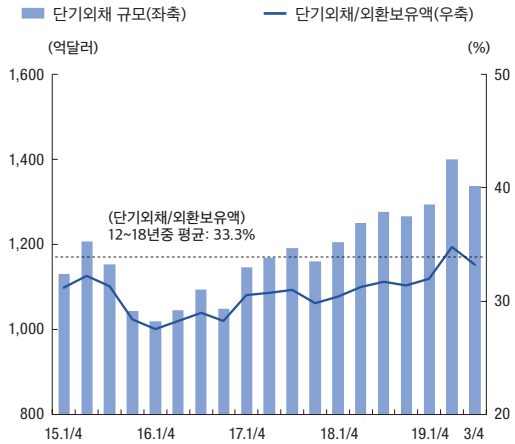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2019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동기(31.7%) 대비 소폭 상승한 33.2%로 예년 평균 수준(12~18년중 33.3%)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Ⅲ.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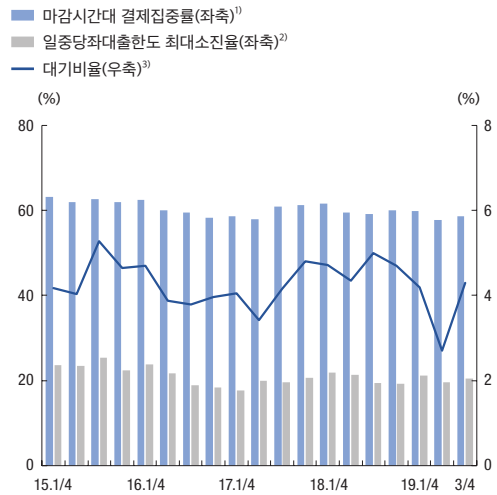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앞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잡성·연계성 증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 금융망의 일평균 결제액은 2019년 3/4분기중 367.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19년 3/4분기중 각각 20.5%, 4.3%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중 58.6%로 금년 1/4분기(59.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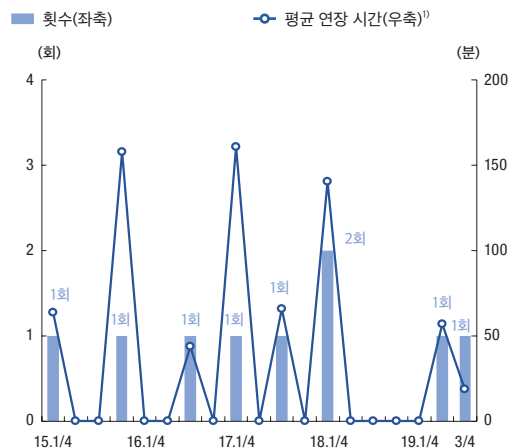
그림 Ⅲ-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은 2019년 3/4분기중 1회로 지준마감일 RP매입 입찰 실시에 따른 것이다(그림 Ⅲ-2).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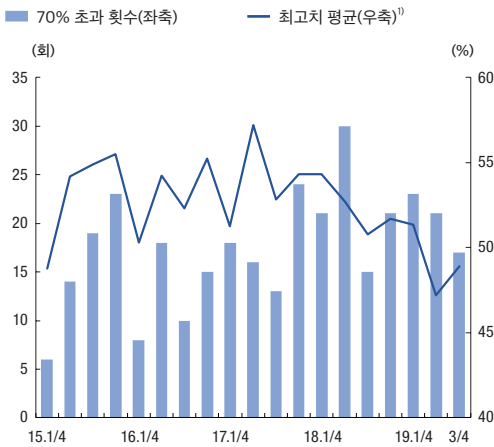
주: 1) 해당 분기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소액지급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지급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019년 3/4분기중 68.2조원으로 지난해(67.0조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지급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¹⁾ 소진율의 최고치 평균은 2019년 3/4분기중 48.9%로 금년 1/4분기(51.4%)보다 하락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초과한 횟수도 3/4분기중 17회로 금년 1/4분기중 23회에 비해 6회 줄어들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분기중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소진율(순이체액/순이체한도) 최고치의 단순평균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결제규모가 꾸준히 확대된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시스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19년 3/4분기중 184.1조원으로 전분기(182.1조원)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RP 거래가 상당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2019년 3/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는 기준시한(16:00, 17:0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 한편 장외 주식기관투자자시스템은 2019년 2/4분기중 기준시한(16:50) 이후 결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표 III-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중에서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은 2019년 3/4분기중 각각 1.6% 및 5.9%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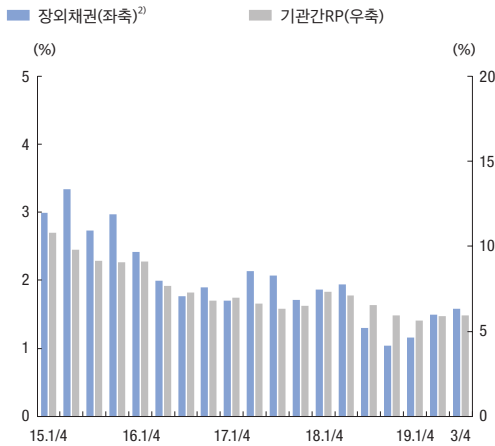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기준시한 ¹⁾	납부비중(%)					
	2018년		2019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0.1010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주식 기관투자자	16:50	-	0.0074	-	0.0905	-

주: 1)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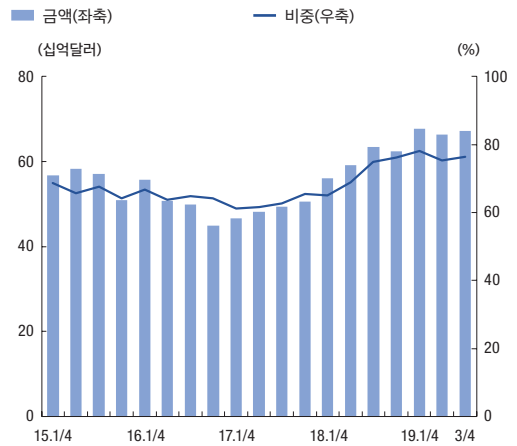
1) CD공동망, 타행간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지급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지급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Ⅲ-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자료: 한국은행

외환결제시스템²⁾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³⁾의 결제규모는 2016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3/4분기중 일평균 672.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2019년 3/4분기중 76.3%로 1/4분기(78.1%)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간으로 보면 대체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Ⅲ-5).

2) 외환결제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3)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18개 CLS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8.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

배 경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공개하고 2020년중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페이스북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도 송금·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브라를 개발했으며, 리브라는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 협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주요국 국채와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연동하여 가치변동성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업계는 리브라가 대규모 글로벌 고객네트워크(약 24억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외송금 등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정책당국²⁾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

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리브라와 비트코인

구분	리브라	비트코인
기본 기술	참여가 제한되는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
가치	담보자산으로 가치보장도모	내재가치 없음(투자자 등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취득 방법	1) P2P 거래 2) 취급업소에서 매입 3) 회원사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	1) P2P 거래 2) 취급업소에서 매입 3) 채굴
운영 방식	중앙화된 운영자(리브라 협회) 존재	분산화 방식

국제논의 동향

G7,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혁신의 편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10월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³⁾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보호, 금융안정 문제 등 법·규제·감시 측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1) A stablecoin can be defined as a crypto-asset designed to maintain a stable value relative to another asset (typically a unit of currency or commodity) or a basket of assets. (『Regulatory Issues of stablecoins』, FSB, 19년 10월)

2)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리브라와 관련되어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 등과 관련해 많은 심각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규제에 대한 검토도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리브라 도입은 이러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19년 7월 10일),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리브라와 같은 혁신적 기술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출시 전에 표준 및 규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19년 6월 18일).

3) 『Inves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보도참고자료]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19년 10월 30일)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있으므로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FSB도 2019년 8월 스테이블코인 실무그룹(RIS: Working Group on Regulatory Issue of Stablecoins)을 구성하고 국가별 규제차이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권규제 관점에서의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 의회는 청문회(7월 16~17일, 10월 23일)를 실시하고 리브라가 초래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독일 정부도 국가의 통화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리브라 출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9월 13일)하였다. 또한 영국 정보위원회는 리브라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8월 2일)하였으며,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9월 11일)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이슈와 잠재리스크

G7은 2019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이 신용, 유동성 및 운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 신뢰가 저하되어 대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환매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조달이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성 수신(wholesale fund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금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자산의 투명한 관리, 공시보고서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명확한 지배구조가 요구되며, 시장·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FSB 등 다른 국제기준 제정기구도 관련 시장 규모나 금융기관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빅테크(Bigtech)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적 중요도가 빠르게 증대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연계된 담보자산(은행예금, 외환 등)이 부실화되면 스테이블코인 가치하락(runs on stablecoins)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통화당국의 정책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국가 간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자본유출입 관리 등 거시경제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사점

86

스태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고, 비용절감, 금융포용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관련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운영자·중개업자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위험과 의무, 권리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는 기존 규제·감독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각국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에 앞서 발행자에게 투명성 강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개별 당국의 대응능력이 제약될 수 있는 데다 상이한 규제체계에 따른 차익거래가 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긴요하다. 한국은행도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당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